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김 동 욱\*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행정정보화의 원칙  |
| II.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 V. 행정정보화추진의 중점 |
| III. 행정정보화 추진내용 | VI. 맺음말        |

<요 약>

정부는 행정의 능률성, 투명성, 주민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정부조직과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의미로서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리더십이 국가발전과 연계된 정보화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화는 조직의 개편과 업무절차의 재편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는 정보기술과 행정조직혁신(BPR, bench-marking 등)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주민이나 공무원이 단일창구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화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부내부의 저항을 극복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부문의 정보기술과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하에서 첫째, 행정기관별로 정보화책임자(CIO)를 육성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하여 CIO들의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업이나 일반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사업과 다행정기관관련 업무 등에 둬으로써 정보화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정보의식과 정보활용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1인 1대 PC의 보급은 필수적이며, 공무원개개인의 정보화수준과 수요에 맞는 정보화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 I. 머리말

선진국진입의 문턱에 있는 우리에게서 무한경쟁의 국제적 환경과 우리사회전반의 민주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정보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최근들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문에서도 행정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행정정보화를 추진중에 있다.

1987년부터 5년간에 걸친 제 1 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주민, 토지,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 등 6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망을 개발하였고, 제 2 차 행정전산망사업 기간(1992-1996) 동안에는 우체국종합서비스 등 7개의 업무를 우선추진업무로 개발중에 있으며 행정기관간 DB공동이용체제를 갖추어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대체로 각 부처별 단위업무별 전산화이었고 정보의 공동이용은 미흡하였으며, 전산화 노력이 업무처리과정의 개선노력과 큰 연관없이 이루어져 업무생산성이나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정보화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0년대 후반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 추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정부의 관료위주, 부정과 비능률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한껏 높아져 이제 정부는 업무의 능률성, 정책결정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행정조직내외의 압력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국민편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의 향상시키고 열린정부의 이상에 다가가는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하면서 IT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로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절에서는 전자정부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행정정보화의 유형을 서술하고, 유형별로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행정정보화의 노력을 평가해 보고,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전개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Ⅱ.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 1. 전자정부의 개념과 가치전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미국에서 일반대중이 많이 모이는 쇼핑센터나 학교 등에 설치된 무인은행기계(ATM)처럼 정부서비스도 하루 24시간 다양한 지점에서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이라는 용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에서 출발된 전자정부의 개념에 여러가지 기술적이고 이념적인 수식이 가미되어 최근에는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digital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정부' 또는 '정부의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로 전자정부를 정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고객대응적(customer-responsive)이며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또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조직내, 조직간, 정부와 민간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효율, 서비스의 질,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로서 정부의 가치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자정부를 이해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술(네트워크와 디지털정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로 전자정부를 정의하고 행정정보화는 전자정부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정부에서 electronic의 단어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외부의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해 관료적 계서제(Hierarchy) 조직에서 분권적이고 망상형조직으로 바뀌어진다고 보면 정보네트워크이라는 기술적측면과 망상형이라는 조직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정부(network government)가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전자정부에서는 행정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하고 보관하며 전자결재,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동화, 단순화, 연속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복합적인 민원도 일회에 처리되는 One-stop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정보의 공개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는 열린정부를 실현하게 된다.

전자정부의 논의에서 정보라는 자원은 토지나 자본같은 자원과 달리 많은 개인

이나 조직이 사용하여도 마모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시민간에도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는 공동이용이나 나눔(sharing)이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조직의 벽을 허무는 열린정부, 열린사회가 가치전제가 된다. 또한 전자정부라는 논의에서 전자적 방식의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여 PC를 통한 서비스같은 고급정보서비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정보활용력(information literacy)수준에 따라 적절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정부에서는 주민의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한다는 형평성의 가치를 배려한다고 본다.

## 2. 전자정부구현과정으로서의 행정정보화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의 관계는 전자정부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정정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전산화, 행정망사업, 그리고 행정정보화라는 용어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나누어 본다면 추구하는 목표과 영향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전산화는 업무처리의 비용절감과 하드웨어중심이라면 행정망사업은 DB를 구축하고 이를 전산통신망을 통해 여러 부서, 기관에서 공동이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앙중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정정보화는 열린조직을 지향하면서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주민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정보기술보다는 이념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정보화는 단순한 정보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행정조직과 업무처리절차 등의 혁신내지는 재설계의 노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따라서 행정정보화는 조직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층과 실무층 모두가 참여하여 조직의 전략형성에서부터 세부업무처리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정보화를 통해 대량의 행정정보가 여러기관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관·유통되어 이를 활용하여 업무수행에서 물적·인적 자원과 시간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정책결정의 합리성, 민원서비스의 질, 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게 된다. 한편 행정정보중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물적정보, 영업이나 기술정보 등이 정부기관에서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정보화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기술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3. 행정정보화의 구성요소

행정정보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첫째로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정보생산자와 정보를 이용자가 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정보제공자이면서 이용자의 위치에 있고 국민들도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민원신청이나 서비스수혜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입장이 된다.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수준에서 공무원개인이나 주민, 조직수준에서 행정기관, 기업, 단체 동일 수 있다.

둘째 요소로서 정보내용(Contents)을 들 수 있는데, 정보내용을 개별적(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와 통계정보, 서식정보, 문헌정보 등 정보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디지털된 정도나 DB화 정도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행정공무원이나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의 정도와 효율성과 대응성의 증대라는 행정정보화의 효과는 정보내용의 적절성, 체계성, 정보량, 그리고 활용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셋째 요소는 정보기술시스템으로 정보의 생성과 유통 그리고 보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처리 및 단말기, 시스템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서버, 라우터 등의 통신장비, 통신회선, 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시스템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지만 고도화된 정보기술의 H/W, S/W,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기술인력의 비용은 행정부예산에 비해 여전히 높아 부담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넷째 요소로서 제도환경에는 행정정보화에 관련된 법령, 행정관행, 예산제도, 정부리더십의 지지와 관심 등이 포함된다. 다수의 행정공무원과 국민이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상호유통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많은 법령의 개폐 등의 제도적인 변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직, 예산, 리더십의 지지 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 4. 행정정보화의 유형

행정정보화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행정정보화는 정보화의 효과가 주로 기관내부에 귀속하느냐, 관련기관과의 관계에 귀속하느냐, 아니면 정부조직외부로 귀속하느냐의 목표지향 대상에 따라 기관별 정보화, 기관공동 정보화, 정부외부지향의

〈표 1〉 행정정보화의 유형과 추구가치, 행정정보화사례

지향대상 정보화내용	행정기관 내부	행정·공공기관간	정부외부
업무처리중심	내부업무 전산화 업무처리 효율성 (중앙공무원인사 DB)	다기관공동업무정보화 기관간 협조, 업무처 리 효율성 (토지종합정보망)	민원서비스 정보화 민원인 만족 (여권발급전산망)
정보산출중심	정책지원정보화 정책결정 합리성 (외교활동정보)	정책투입정보의 공유 투입정보수집의 능률 성, 정책조정의 효율성 (경제·통상DB)	열린정부 정보화 행정의 투명성 알권리신장, 여론수렴 (열린정부서비스)

정보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보화내용이 업무처리중심이나 정보산출중심이나에 따라 업무처리중심의 정보화와 정보산출중심의 정보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분류기준을 결합한 것이 〈표 1〉이다.

첫째, 정보화효과가 기관단위에 한정되고 업무처리중심인 정보화를 '내부업무 전산화' 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화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업무를 일회로 처리하거나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게 된다. 업무처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고 행정자료의 보관(archives)이 병행된다. 정보내용의 정확성과 대규모성, 즉각적인 갱신 등이 매우 중요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내용이 담겨 있는 DB의 개발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유형으로서 정보화효과가 기관단위에 한정되나 정보화의 내용이 문헌자료, 통계 등의 한 번이상 가공된 이차적인 것으로 '정책결정지원정보화'이다. 이 경우 관련 현황과 추이 등의 통계, 해외정보,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체계적이고도 대량으로 확보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게 된다.

셋째의 유형으로서 정보화효과가 다기관에 걸쳐 나타나고 공동업무나 협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다기관공동업무정보화'라 부르고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에서 기관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게 된다.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유지강화가 기본관심이면서 공동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추구하게 된다. 기관간에 온라인(On-line) 형태의 유통네트워킹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업무정보와 전자우편이 유통되며, DB개발에서 관련기관간의 자료항목분류나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이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유형으로 다기관이 정책결정에 투입되는 정보를 상호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다기관정책투입정보 공유'의 경우, 투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량으로 확보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한편 기관간의 정책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을 기대한다. 해외정보, 기술정보, 연구산업동향정보 등은 각 기관에서 가공되지 이전의 상태로는 관련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관련 기관간의 자신들의 수집자료목록을 제공하여 상호간의 정보수집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기관이나 문헌에 대한 중복적 자료수집을 줄이고 정보제공이 참여기관에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유형으로 정보화효과가 정부외부의 민간을 지향하고 업무처리중심인 '민원서비스 정보화'의 경우, 민원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민원인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One-stop, Non-stop서비스는 민원서비스 정보화의 주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민원건수가 많은 업무, 민간의 불편이 많은 업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민원인이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도입초기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게 시험기간을 거치고 일선공무원에 대한 사용교육훈련을 충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효과가 정부조직외부에 집중되고 정보화의 중심이 비개별적인 정보의 산출인 '열린 정부 정보화'의 경우, 정부나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며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추구한다. 정부정보나 공공안내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서와 책자이외에 전화나 Fax, 그리고 정보망을 통한 전자적 전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게 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행정정보는 자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외부로 정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망을 통한 정부와 민간간의 접촉이 확대됨에 따라 평균 수준의 국민이 큰 불편없이 다양한 정부DB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조작방법이 간단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 Ⅲ. 행정정보화 추진 내용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으로 구축된 주민관리, 토지관리, 자동차관리 등 6개 업무의 DB와 전산망을 바탕으로

행정정보의 전국적인 공동이용체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열린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NATIS라는 망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고속망을 제 1, 2 정부종합청사에 구축하였다. 또한 내무부의 주민등록정보, 토지정보 등이 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민원업무의 경우 민원창구에서 관련정보를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여권발급전산망이 구축되어 전국적으로 초보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sup>

행정정보화의 유형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내무업무전산화의 경우 제 2 차행정망 사업기간중 각 행정기관별로 자체의 예산으로 통상산업부의 산업정보관리 등 76개의 기존업무(406개의 세부업무)DB가 보완·개선되었고, 재정경제원의 심판업무, 노동부의 고용보험관리 등 59개의 업무(134개 세부업무)에 대해 신규로 DB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다.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DB가 구축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전산File수준의 것으로 검색이나 자료조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자동화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책지원정보화의 경우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등 행정기관에서는 LAN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서간에 공동으로 필요한 문건이나 통계자료 등을 유통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상위직을 위해 정리된 정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정책관련통계나 정책연구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으나 세분류의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연구결과를 요약 소개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기관공동업무정보화의 경우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의 정보들이 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되면 정보보유기관에서 배치파일(batch file)로 만들어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21개 행정기관의 79개 DB중 일부정보가 타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는데, 공동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완작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타기관DB의 이용도가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주민등록정보의 경우 내무부 주민과에서 교육부의 학령아동현황,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현황 등의 업무 등 16개기관의 46개 업무관련하여 주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무부의 지적과의 국토정보센터에서는 내무부의 지적DB, 주민등록DB,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DB에서 선별적자료를 통합하여 현재 총무처,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대기업 소유토지 등 토지현황과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총무처의



NATIS는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인용 전자우편주소를 부여받은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아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협조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투입정보의 공유의 경우 총무처의 NATIS는 전산망 연동서비스로서 국회 도서관망(NOLIS), 통계청의 통계정보(KOSIS), 노동부의 고용정보,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정보, 서울대 정보광장, KNITI-IR(산업기술정보원) 등의 공공망, 천리안, 하이텔 등의 상용망 그리고 인터넷의 Telnet서비스가 제공하여 정책관련자료의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제 1, 2, 3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인 정부고속망을 구축중인데, 정부고속망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부처내 LAN을 전중앙행정부처로 연결하는 대용량망으로서 시·도와 시·군·구도 내무부의 지방행정정보통신망(MOHA-Net)을 통해서 정부고속망에 연결된다. 이 망이 구축되면 접속과 전송속도의 향상, 화상정보로의 전환이 원활해져서 행정기관간 정보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투입정보의 공유를 목표로 외무부, 재정경제원, 그리고 통상산업부가 주요경제지표, 국제기구정보 등 경제통상업무DB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이용할 계획이었는데, 외무부의 연락관이 제 2 청사에 상주하여 해외정보를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에 제공하고 NATIS에 한국무역협회,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망연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말았다. 부처간 영역확보의 입장이 아주 강하여 결국 정책결정에 필요한 투입정보의 부처간 공동이용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민원서비스 정보화는 제 1 차 행정망사업을 통해 구축된 주민정보, 토지정보, 자동차정보, 고용정보 등과 같이 제 2 차 행정망사업에서도 우체국종합서비스, 국민복지업무, EDI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 어선관리 등의 7개 우선추진업무와 농업기술정보관리, 환경보전관리, 국제종합관리 등 3개 중점지원업무가 업무자동화와 함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중에 있다.

다기관관련 민원서비스의 경우 유일한 사례로 여권발급업무가 외무부, 내무부, 병무청, 경찰청 등의 관련 DB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각 시·도청에서 여권발급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서 즉시로 여권을 발급할 수 되었다. 여권발급신청시 종전에 여권신청인이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을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신청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광역시나 구청에 제출하면 그 자료가 외무부 여권과로 온라인으

로 전달되고 여권과의 여권발급DB 시스템으로 가서 여러가지 사항이 조회되고 처리된 후 다시 신청한 민원실의 단말기로 결과가 전달되어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발급DB에는 주민등록DB, 병무DB, 신원DB 등과 외부부의 여권 및 기변기록 등이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96년 현재 15개의 시·도청 및 서울시의 4개구청(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에서 일반여권의 발급, 기재사항변경, 여권의 분실신고 등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열린정부 정보화의 경우 각 행정기관이 다양한 채널과 형태로 일반국민에게 행정정보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알림마당, 공공DB마당, 민원마당, 대화마당 등으로 통합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타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열린정부서비스의 공공DB마당에는 96년 6월 현재 59개의 DB에 대한 검색서비스로 인사정보, 입찰정보, 국정신문, 주택정보 등의 행정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마당을 공중망에 개설하여 일반국민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1996년 현재 Web site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공보처(Korea Window, 알림마당),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등이다.

96년 9월25일 12시 23분		열 린 정 부		문의: 02) 720-3815
[알림마당]	[공공DB마당]	[민원마당]	[대화마당]	
11. 보도자료	31. 관보	41. 국가시험	51. 국민의소리	
12. 정부인사	32. 현행법령	42. 민원사무	52. 제도개선	
13. 정부입찰	33. 경제정보	43. 민원상담실	*53. 국민제안	
14. 최신법령	34. 통일외교	54. 주제토론		
15. 입법예고	35. 여행정보	55. 설문조사		
16. 경제정책	36. 농림수산정보			
17. 외국환율	37. 정부간행물			
18. 고시공고	38. 행정자료			
19. 국정소식	39. 행정코드			
*20. 부처소식				
*21. 주요행사				
1. 열린정부란?		2. 이용안내/문의		3. NATIS부가정보
명령>		(*서비스예정)		

<그림 1>

〈표 2〉 대국민 제공 행정DB

기관명	DB 명	주요내용	공개매체
통일원	통일·북한소식	통일정책, 북한동향, 통일마당, 남북교류 협력현황, 통일게시판 등	천리안 하이텔
총무처	행정종합정보	일반행정, 관보목록안내, 법령정보, 도서 정보, 국가시험정보, 공통행정코드 등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과기처	과학기술동향	과학기술통계, 과학기술동산, 연구개발활동, 원자력, 정책및제도	천리안 하이텔
공보처	열림마당	정기간행물등록정보, 해외주요매체현황, 보도자료, 문화홍보영화목록, 해외홍보자료, 국정신문 등	에이텔, 천리안, 하이텔
교육부	교육부열린마당	도서자료목록, 행정자료목록, 자치법규목록 교육통계, 정책소개, 민원안내텔	하이
통상산업부	통상마당	국내외광업동향, 국내외자원시세, 자원수출 입통계, 전기정보, 원자력정보, 통상정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	나우누리
환경부	환경정보소식	환경소식, 환경오염현황 등	하이텔
	환경부 소식	오염도자료, 환경마크 안내 등	천리안
외무부	세계의 창	국가별 개황정보, 국제기구의 연혁조직·주요활동, 외교정책정보 등	천리안
노동부	취업알선시스템	취업알선 통계	직접접속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전국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정보 (소재지, 용도, 지목별 검색)	천리안 하이텔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	농림수산정보	가격정보, 수출입통계, 농업통계, 수산통계, 부수출입통계, 목재유통정보, 어항정보, 전국 어촌계정보, 해외축산물 수급동향 등 유통 정보, 농림수산문헌, 종자정보 등	직접접속 천리안 하이텔
경찰청	경찰청 민원 서비스	경찰청 이용안내, 홍보자료실, 여론수렴실, 민원상담실 등	천리안 하이텔
병무청	병무안내	입영일자, 징병검사 일정안내, 각군모병, 병무청 지정병원 안내 등	천리안 하이텔
농촌진흥청	농사기술종합정보	농사기술백과, 작목별 농사메모, 국내농업 연구문헌정보 등	직접접속 천리안

〈표 2〉 계 속

기관명	DB 명	주 요 내 용	공개매체
통 계 청	통계정보시스템	국토면적, 기후, 인구, 주택, 국민계정, 물가, 도시가계, 지역내 총생산등에 관한 통계, 국제통계 등	직접접속
조 달 청	입찰정보시스템	구매요청정보, 입찰공고정보 등	직접접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행정정보	한국산업규격정보, 인허가제조업체정보, 국내기술인정보, 시험설비이용알선정보, 관리기술목록정보, 소비자보호정보 등	천리안
철 도 청	철도이용종합정보	열차운행시간 및 잔여석조회, 열차요금표, 열차기획상품 등	하이텔
국 세 청	세무정보	세정안내, 유익한 세금상식, 세금문답, 계정 세법해설 등	천리안 하이텔 에이텔
특 허 청	특허정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에 대한 출원·등록 및 심판에 대한 진행사항	전용단말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	선박입출항정보, 항만시설 사용현황, 본선 동정, 모선별도·예선일정현황, 항만운영 통계 등	전용단말기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소식	문헌정보, 이달의 문화인물, 새영화소식, 박물관소식, 미술관소식, 국악원 소식, 국내관광정보 등	천리안 하이텔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정보	문화재소개(종류별, 지역별), 안내지도정보, 박물관안내 등	하이텔

자료: 총무처 행정전산과

#### Ⅳ. 행정정보화의 원칙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추진상에 많은 제약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여섯 개의 원칙중 첫째로, 리더십집단이 공유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전자정

부의 구현은 미래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발전전략의 주요한 요소로서 국토의 통일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정부의 리더십에서 공유하고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 1 차 정보화추진확대회의에서 김대통령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에서 정보화의 5대 목표, 5대 원칙, 그리고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선진제국에 비해 낮은 감은 있지만, 비전제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정보민주주의원칙,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생산성 높은 정부구현 과제 등의 비전제시를 통해 행정정보화가 국가발전전략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총무처중심의 행정전산망사업에서 총무처 리더십의 지지조차도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전산과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수준에서의 리더십만으로는 행정기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가사회정보화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실이 주관하고 전자정부구현의 과제는 총무처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체제인데 총무처, 내무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종정책조정 역할을 맡는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수립 과정에서나 계획내용에서 사용자·이용자중심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열린 정부로서 기관간, 정부와 민간간의 경계를 극복하면서 다양한 기관, 조직, 그리고 개인이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정보화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되는 성과지표를 목표치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의 행정정보화의 목표치를 보면 DB나 네트워크축의 열거로서 DB가 서로 연결되어 어떠한 업무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가는 충분히 기술되지 않고 있다. 어떤 수준의 서비스가 어느 시점에서 정보화를 통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여야 DB간 공동이용도 활성화되어 정보화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사업과정에서 피드백도 가능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DB개수나 전산장비의 성능만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으로서 총무처의 행정정보화발전계획(96.7.)에 따르면 기술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범위내지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세째로, 행정정보화는 조직의 개편과 업무절차의 재편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기술적이고 장비구축인 과제(Issue)가 아니라 정보기술과 조직관리를 포함하는 관리와 개혁의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혁신이론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목표설정(bench-marking)의 주요내용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업은 장비의 구축같이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을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전산위주의 책임자가 아닌 정보기술과 행정조직을 공히 이해하는 정보화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각 행정기관에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CIO는 정보화에 관련된 법제적인 정비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사무관리, 정보보안, 정보공개 등에 정보유통에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홀로그래픽(holographic)한 관점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전체의 한 부분도 전체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구가 전체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모든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러한 창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든, 전화기이든, Kiosk이든, 개인용 PC이든 상당없이 동일한 질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결시키주는 Locator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고, 조직의 기능적 배분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서제적 조직에서 망상형조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 부처할거주의 등의 기존 조직행태(behavior)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들어 대다수의 행정기관에 LAN이 구축되어 있지만 정보통신부 등 일부 기관이 기관내의 대다수의 PC를 LAN에 연결하고 있지 아직도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과단위로 한 대의 PC만 LAN에 연결하는 형태로 있어 LAN을 통한 외부와의 통신이나 자료유통은 물론 기관내부에서도 전자적 통신은 사실상 불가능 상태이다. 정부는 시급히 LAN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LAN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행정정보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차원이나 조직차원에서 정보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나 생산성을 향상에 따른 보너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차원에서 정보화를 하면 오히려 인원과 예산이 축소되고 다른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면 조직적 저항이 예상되며, 정보화

를 잘하는 개인이나 부서에 대해 보너스나 인사고과를 높여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서 정부조달 EDI사업의 추진이 지체되는데에는 공무원들이 필요인력감소를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화교육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훈련 유무와 시험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핵심인력이 교육훈련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IT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기관내에서 시스템소프트웨어나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을 낭비일뿐이며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보호 등의 기능은 물론 일상운영도 외부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Outsourcing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지금의 정부내의 인력으로는 양과 질 공히 미흡하며 민간의 양질의 인력을 민간기업수준에 맞는 보수로 제공하면서 정부내로 영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직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을 대폭 정비하여야 한다.

## V. 행정정보화추진의 중점

### 1. 추진체계와 행정기관별 CIO의 역할

국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하에서 행정정보화는 제 2 차행정망사업에서와 같이 행정기관별로 제각기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어진 목표하에서 행정기관별 정보화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고, 범부처적인 사업의 경우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또는 확대회의의 조정아래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책임회피 또는 관할권경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복투자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관내부의 업무에서는 기관별CIO의 책임하에 정보화를 추진하고 다기관관련업무나 대민간업무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CIO의 협력적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무과(예: 내무부 주민과, 지적과, 전산지도과)에서 정보화 업무를 하기보다는 기관별 CIO가 이를 담당하고 타 기관의 CIO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기관내에서는 CIO를 중심으로 집권화하면서 범정부적으로는 이들 기관들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고속행정정보망)를 만들고 이를 중앙전산본부가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CIO는 각 기관내부에서 육성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총무처와 내무부의 CIO가 주관역할을 하고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는 예산과 기획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망운영과 기술지원의 역할을 하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와 한국전산원 등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2. 외부지향의 정보화사업추진

경제발전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정보화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외부지향의 행정정보화는 궁극적으로는 민원서비스 정보화와 열린정부정보화의 유형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고 이것이 전자정부 내지는 정보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일반국민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정부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능하면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외부지향의 정보화에서는 경우 여러 행정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지는데 행정기관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CIO들은 주요 정책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명시적 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행정기관별 정보화작업으로 DB개발 이후 문제해결로 연결되게끔 개발대상업무, 지원규모, 그리고 개발일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시점에서는 연관되는 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업무 개개의 전산화보다는 패키지베이스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지향의 정보화에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목표에 따라 추진내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화사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예로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목표로서 민원처리시간, 창구면접횟수, 정보검색시간, 문서의 디지털화된 비율,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문서제출비율 등을 매년도 설정하고 정보화사업이후 평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3. 공무원의 정보의식(information mind)과 정보활용력의 제고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체계속에서 행정기관은 정보처리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자신들의 업무속에서 매일 엄청난 정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정보의식과 정보활용력이 전자정부의 구현의 관건이 되며 공무원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확산과 자신들의 업무와 연결되는 정보화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범정부적인 정보화교육훈련중심에서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자신들의 업무와 연계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교육훈련이 될 수 있게 정부전산정보관리소나 각 행정기관별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민간기관도 교육훈련주체로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정보의식과 활용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공무원별로 1대의 업무용 PC의 보급은 필수적이며, 또한 정부내의 모든 PC가 기관의 LAN에 연결되어 기관내부와 외부 어디로나 접속될 수 있게 네트워크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4. 행정정보화유형별 세부적 제안

원칙이나 중점추진방안에서 언급되지 않는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해 본다면 내부업무전산화에서는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문서보관(archives)도 행정정보공개를 전제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지원정보화에서는 결정된 정책안의 요지와 정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의 DB화, 행정기관과 정책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연결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기관공동업무정보화에서는 수많은 협조요청공문작성과 유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수시로 실무진간에 의사소통과 자료교환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의 개인주소를 부여하고 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고, 정책투입정보공유에서는 해외정보중 국제기관의 공식문건이나 회의 내용, 보도자료 등은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하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 자료수집분담과 공유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원서비스정보화에서는 사업효과가 뚜렷한 정부조달이나 조세관련업무의 통합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열린정부정보화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현재의 각종의 연감, 통계, 정책안 등 책자로만 발간되는 내용을 디지털로 정보망에도 제공하여 수량에 제한없이 국민들이 download할 수 있게 전환되어야 한다. 여론수렴의 마당운영에서는 저질과 유언비어를 처리하는 문제와 제안된 내용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정부내에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나 공정

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여론수렴마당을 관리하게 하고 정리된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5. 행정정보화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행정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를 보완내지는 개선하여야 하는데, 디지털정보의 법적효력부여,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정보기술시스템확충 등의 이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정보의 법적효력문제로서, 기존의 사무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에 대해 접수, 처리, 등록, 분류, 보존에 관한 공인력을 부여하고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비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전자신고, 전자서명, 전자관인, 전자결재, 전자문서처리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도 One-stop이나 Non-stop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적용범위와 대상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문건의 공인력이나 정보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를 기존 개별법들에 신설하기 보다는 전자적인 사무관리와 민원업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문서감축법(Paper Reduction Act)<sup>2)</sup>와 같은 행정사무간소화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하여 부처간 공동이용을 가능하게끔 정보보유기관의 일정범위의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하고 다 기관관련정보화사업 추진에서 관련기관의 전산개발의 협력의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비용을 정보이용기관이 분담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협의로 정보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 공동이용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sup>3)</sup>의 조항들과 상치되지 않

2) 1995년 10월에 개정된 Paperwork Reduction Act에서는 연방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기업, 교육기관 및 비영리기관, 연방계약자, 주정부, 지방정부 등 연방 정부를 위한 정보수집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작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가 형평에 맞게 적기에 보급될 수 있게 정보수집과 정보자원관리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되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조약 기타 국

아야 한다.

정보시스템확충의 이슈로서, 기존의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장비의 기술적 내구연한이 점차 짧아지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정부조달이나 재물관리규정의 대체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대체기간을 단축하고 구매나 도입절차도 간소화하여 장비사용부서의 요구가 장비구매과정에 반영되게끔 정부조달과 물품관리 관련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

## VI. 맺음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의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제시는 정부부문 정보화노력의 새로운 지평임에 틀림없고 이에 정부내외의 정보화관련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이제까지의 지지부진을 털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분발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구현과정으로서의 행정정보화가 지켜야할 원칙과 추진의 중점을 제시하였는데 리더십의 비전, 전략계획, 조직혁신과의 연계, 홀로그래픽한 관점, 인센티브제공, 민간역량활용 등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CIO간의 협력, 외부지향적 정보화에 대한 우선순위, 공무원의 정보의식과 정보활용력 확보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하였다. 법제도적인 개선안으로 전자문건의 효력인증, 행정사무간소화법, 정보공동이용규정, 정보장비조달 및 관리 관련 법령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구현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완성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글을 맺는다.

---

제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제 7 조에서 정보공개적용이 제외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섭,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행정DB공동활용,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2 호, 1996. 6.
- 김동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2 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1995. 12.
- 송희준 외, 전자정부 FORUM,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3 호, 1996. 9.
- 송희준, 한·미·일의 전자정부 구축사례에 대한 국제 비교,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3 호, 1996. 9.
- 안문석 외,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2 호, 1996. 6.
- 유평준,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 3 권 제 3 호, 1996. 9. 1996. 6.
- 전자신문, 「해설」정보화 5대목표 상세내용, 1996. 10. 15.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 1996. 6.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시행계획, 1996. 9.
- 총무처, '95년도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실적평가, 1996. 4.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기반과 행정서비스, 1994. 12.
- 한국전산원,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1995. 10.
- 한국전산원, 일본정부의 행정정보화추진계획, 1996. 4.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1996), 1996. 5.
- 한국전산원, 정보화촉진기본계획해설서(1996-2000), 1996. 9.
-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행정정보화발전계획안(정보화촉진시행계획), 1996. 7.
- 통신개발연구원, OECD Workshops on the Economics fo the Information Society, 1996. 10.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 Less: Status Report, 1994. 9.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invention' s Next Steps: Governing in a Balanced Budget World, 1996. 4.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Making Government Work: Electronic Delivery of Federal Services, 1993. 9.